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87
----------	------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 : 김민기 · 조승래 · 이원욱
송기현 · 김병욱 · 서동용
강선우 · 이탄희 · 김진표
안규백 · 김병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군사경찰은 군의 기강과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군의 경찰작용을 통해 군이 전투력을 보존·발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는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행사방법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실정임.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군사경찰령」,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 외에 특별한 개정 없이 1949년 제정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타 현행 법률(군사법원, 형사소송법, 군인사법)과 충돌 등 위헌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법익 침해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임.

군사경찰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지역 등에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군사지역 등에서의 질서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군사경찰장비·군사경찰장구·분사기 등 군사경찰무기는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사경찰장구·분사기 등 또는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사경찰부대에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군사경찰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군사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군사경찰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군사지역 등에서의 질서유지와 안전 도모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인 등”이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및 군무원과 이법에 따른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범죄”라 한다)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수용자 관리
 5. 군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
 7. 주한 미군 및 외국 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예하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둔다.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해 군사경찰실(단)을 둔다.
-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군사경찰인 병(兵)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2조제1호에 명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③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② 제1항에서 “군사경찰장구”란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제지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봉·전자충격기(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제7조(분사기등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및 최루탄(이하 “분사기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분사기 등”이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한다.

제8조(군사경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2.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3.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체포하기 위하여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군사경찰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및 공용화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말한다.

③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으로 보아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때에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장은 소속 부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군사경찰장비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제5조에서 제8조까지에 따른 군사경찰장비·군사경찰장구·분사기 등 및 군사경찰무기(이하 “군사경찰장비 등”이라 한다)의 사용방법 및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장비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④ 군사경찰장비 등의 사용 및 점검검사의 기준, 사용방법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기록의 보관) 제6조에 따른 전자충격기(충), 제7조에 따른 “분사기 등”, 제8조에 따른 군사경찰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현장책임자·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군 교정시설 운영) ① 군사경찰부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② 군 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의 시설기준, 운용방식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통운행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운행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와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단속되는 민간인이 군사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및 「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관할 지방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군사지역 밖에서의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 등 군에서 관할하는 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는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군사경찰은 그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또는 군사경찰부대에서 운용하는 시설, 검문소 등(이하 “군사경찰부대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군사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군사경찰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동행 요청에 응하여 동행한 경우 즉시 당사자의 소속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군사경찰은 6시간을 초과하여 동행한 당사자를 군사경찰부대 등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⑦ 당사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경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

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범죄의 예방·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제3조제1항제3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

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